

한국 시민사회 ‘아시아연대운동’의 문제와 과제

전제성*

요약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활동의 중심사업이 ‘아시아연대’로 선회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희소하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 문헌분석, 활동가 인터뷰를 통하여 아시아연대 운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와 문헌분석 및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시아연대운동’의 문제는 자원 부족, 관심 부족, 자민족중심주의, 지역지식의 결핍 네 가지로 압축되었다. 과제로서 활동가들은 교육훈련과 같은 인지적 향상과 민주와 평화로 압축되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선호하였고, 비평가들은 성찰, 체험, 공감, 이해로 요약되는 순환적 과정을 출로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설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사람이 남는 연대,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연대, 아시아의 친구가 되는 연대를 제안하였고, 추상적 품성론을 넘어서 지역지식의 네트워킹과 학습을 통해 비교적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민사회의 편협성을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주제어: 국제연대, 국제협력, 지역통합, 사회운동, 엔지오, 활동가, 자민족중심주의, 지역지식, 지역전문가

5

한국 시민사회
아시아연대운동
의 문제와 과제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2006년도 하반기 전북대 신입교수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서남포럼 공개토론회의 발표문(2006c)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한 서남포럼, 연구를 자극해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인터뷰에 응해준 활동가들, 유익한 조언을 해준 심사자들, 그리고 조사와 수정과정에 도움을 준 전북대 정치학 석사과정생 김현경에게 감사한다. 물론 이 논문의 오류와 단점은 전적으로 필자 책임이다.

I. 머리말: ‘참여·연구자’ 비평?

‘아시아연대’가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핵심어로 등장한 이래 다양한 모색과 성찰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실천의 역사가 짧아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연대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니까 일부 앞선 단체들을 제외하면 길어야 10여 년 정도 아시아연대를 실천했을 뿐이다. 오랫동안 아시아연대를 경험하고 고민해온 오재식 선생은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운동은 “틴에이저(teenager)에 불과”하기 때문에 “몸집은 커졌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오재식 외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다양한 영역에서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아시아연대 운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밝히고 그 해법을 구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때 멀어졌던 ‘아시아’라는 용어가 다시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실천 활동에 대한 학계의 분석은 놀랍게도 희소하다. 필자도 간간히 주장하고 간단한 논평도 쓰곤 했지만, 오해를 줄이고 설득력을 높이려면 긴 논문의 형식을 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논문이 일종의 종합편인 셈이다.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자료분석, 문헌분석, 인터뷰 방법을 취했다. 먼저 서남포럼에서 2006년에 수행한 동아시아연대운동 활동가설문조사결과(서남포럼 2006, 330-43)가 연대활동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서남포럼은 123개 단체에 설문을 배포하여 연대활동담당자 52명의 응답을 얻어냈다. 필자도 참여했던 이 설문조사는 국내 최초의 작업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한 논문이 없었다. 다른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8년에 한국의 국제협력관련 기관근무자, 활동가, 전공학생 등 310명을 대상으로 시도한 설문조사결과(이정옥·김상돈 2008)가 보조적으로 활용되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40명이 응답한 이 조사결과는 연대운동의 과제에 대한 현장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 문헌분석에 있어서는 연대운동에 관심을 둔 소수 학자들의 글이나 대담 내용이 분석되었다. 서남포럼에서 2005년과 2006년 연말에 야심차게 기획하였던 동아시아연대운동 평가회의 자료집과 『동아시아연대운동단체백서』의 문헌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학자 및 활동가 대담이나 단독 논문들도 아울러 분석되었다. 인터뷰 조사는 한국의 아시아연대운동가들, 한국 시민사회와 교류경험이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활동가들을 직접 만나서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문헌분석과 인터뷰조사는 연대운동의 문제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물론 이 논문은 기존의 설문과 문헌에 대한 소개와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필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필자는 1995년부터 15년간 여러 단체를 통하여 아시아연대운동에 참여해 왔기에, 실천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동지적 애정에 입각하여 비평하고 제안하는 일종의 ‘내부자적 비평’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런 필자의 위치를 ‘참여-연구자’라고 표현해 보았다. 참여자 겸 연구자라는 뜻이고, 참여를 하다 보니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필자의 참여 경험이 주창형 NGO(advoca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비평이 개발형(복지-구호형) NGO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설문과 비평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아시아연대운동의 문제와 과제를 소개하고, 이렇게 회자되는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필자가 서로 연결 짓고 대안을 찾아보는 일종의 재해석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할 것이다. 이 논문이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업무담당자들을 자극하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연구자들의 연대운동 관련 연구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회자되는 문제와 과제

1. 문제

(1) 자원부족과 관심결핍: 서남포럼 2006년 설문조사

2006년에 서남재단의 후원을 받는 서남포럼은 국내 최초로 “동아시아연대운동 활동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수는 52명으로 많지 않지만 모두 국제연대 담당자들이고 39명(75%)이 동아시아연대운동에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들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연대운동의 최전선에 자리한 주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쩌면 아시아연대운동 인적자원의 전부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항은 연대운동의 성과 및 만족도에 관하여 8개, 연대운동단체 내부 환경에 관하여 13개, 외부 환경에 관하여 15개, 동아시아 담론에 관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관하여 각각 ‘만족도’, ‘내부환경’, ‘외부환경’, ‘동아시아담론’으로 축약하여 표기하겠다(설문의 문항과 응답은 서남포럼 2006, 330-43).

먼저 ‘만족도’ 조사의 답변들을 보면 많은 활동가들의 소외(疏外)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활동성고가 높다고 평가하는 활동가는 전체의 40.4%인 반면에 보통이라고 답한 활동가가 51.9%로 다수를 이루고 성과가 낮다고 답한 이들도 7.6%였다(5번 문항). 더 놀라운 점은 연대활동을 통해 개인적 보람을 느끼는 활동가는 11.5%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활동가(32.7%)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55.8%)도 다른 질문들의 경우보다 특히 많았다(8번 문항).¹⁾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과가 그저 그렇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자원이 부

1) 아시아연대사업에 대한 불만족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협력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4%에 불과했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52%나 되었는데(이정옥·김상돈 2008, 205 표27),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57%로 더 높게 나타났다(214 표30).

족하고, 외부로부터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적 자원 부족은 ‘내부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적 관심 부족은 ‘외부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발견된다. “연대운동 단체 내부 환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73.1%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1번 문항), 65.4%가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답하여(4번 문항), 연대운동이 대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데,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부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답한 활동가가 44.2%나 되는 점(6번 문항)은 인적 자원의 결핍 문제가 장기 지속될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연대활동의 경험이 단체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은 대체로 잘 되지만 단체 간 공유는 일부 활동가들(21.1%)만이 잘 된다고 답하여 연대운동단체 간의 호혜적 정보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13번 문항).

“외부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활동가들의 다수가 연대운동에 대해 시민들이 무관심하며(1번 문항), 단체 외부의 후원이 부족하고(2번), 언론과 방송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4, 5번 문항). 기업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가가 많았지만(54.3%, 8번 문항), 절대 다수(82.7%)가 실제 지원이 수준 이하라고 답했다(9번 문항). 민족주의가 연대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활동가들이 많았고(3번 문항, 55.7%),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활동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3.5%) 이러한 답변들은 적지 않은 수의 활동가들이 연대운동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단서들이다. 또한 다수의 활동가들이 전문가의 연대활동 참여도가 낮다고 답변하였다(6, 7번). 활동가들의 52%가 자기 단체의 연대운동에 학자와 전문가의 참여도가 낮다고 답했으며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였다. 그러다 보니 지역연구에 대한 활동가들의 평가도 비판적이었다.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 수준이 낮다고 답한 활동가들이 65.5%에 달하였다(‘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2번 문항).

(2) 한국 시민사회의 편협성: 논평 분석과 인터뷰 조사

활동가 설문조사에서 내적 자원 결핍과 외적 관심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문헌과 인터뷰에서는 우리 운동의 편협성이 문제로 추가된다. 활동가들의 응답이 불비한 환경에 대한 호소와 학자들을 포함한 주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준다면, 각종 비평은 활동가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연대운동 초창기에 문제를 쏟아놓았던 대표적인 좌담이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 민간포럼을 서울에서 유치한 뒤에 수행된 『당대비평』의 좌담일 것이다. 당시에 지적되었던 단발적, 표피적 연대에 대한 비판은 연대활동이 시간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지적되었던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편협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인용하자면 “아직도 한국의 문제에 코를 박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곽은경 외 2000, 17)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뿌리가 깊은 문제인 것이다.

‘언어장벽’이 원인일 수도 있다(김영래 외 2001, 15; 이기호 2010, 198; 203; 양영미 2010.12.26). 아시아 지역에 언어가 유난히 다양하고 합의된 공용어도 없기 때문에 소통 언어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비평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문제로 향하고 있다. 백영서(2006)교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나치게 자민족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연대를 “자국 이익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기호(2010, 197-98) 교수도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가주의”를 문제로 지적했고, 신윤희(2006, 168) 교수도 “민족이기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문제로 거론했다. 심지어 동족끼리 협력하자는 재외동포연대 사업 분야에서조차도 “쌍방향성의 결핍” 문제가 관찰된 바 있다(박정석 2006).

한국사회 일반에 농후한 민족주의로부터 시민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활동가들도 자민족중심주의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시안 브릿지의 나효우(2006.03.20) 운영위원장은 “한국 사회운동은 자기가 생각

하는 의제가 먼저 있고 그걸 위주로 만나는 습관이 있다”면서, “자기 아젠다와 자기 해석만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의 김찬호(2011.01.02) 교류지원팀장도 “아시아 지역의 문제에 대해 한국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의 활동가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 태국노동연구소 솜욧(Somyot 2006.07.19) 소장도 “한국 운동의 약점은 자국 관련 내용(contents)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에서 버마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웅저(Maung Zaw) 씨도 “국제연대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서남포럼 2005).

자민족중심주의가 ‘운동수출’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역시 활동가들 스스로 일찍이 우려한 바 있다. 이를테면 아레나(ARENA: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의 이대훈 씨는 “한국의 몇몇 운동단체가 이제는 운동을 수출할 때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시민의신문』에서는 우리의 선진적 운동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면서 “연대가 반드시 그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고, 국제연대를 통해 오히려 민족성을 강화할 우려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제연대 운동은 “기본기가 부족”한데, “기본기의 신장은 우리의 레퍼런스(reference)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늘어나는 것”이므로, “일방 토크(talk: 인용자)를 자제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차이와 쟁점을 드러내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서남포럼 2005).

아시아여성노동자회(CAW: Committee for Asian Women) 프로그램간사로 방콕에서 활동했던 박진영(2005, 97) 씨도 “연대는 상호적”이고 “수출이 아니라 교류”여야 하고 “교류에 기반한 이해가 없는 수출은 이식”이며, “그렇게 이식된 운동은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운동수출’에 반대 입장을 선명히 했다. 수출 열망은 “운동의 선진국”이라는 “우월감”과 아시아 이웃에 대한 경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을 요구하였

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양영미(2009) 씨도 아시아연대운동이 “선진과 후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문명과 야만의 양분법에 입각한 ‘꼬마 제국주의자’의 시각”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도 우리 시민사회의 편협성의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연대를 회구하지만 아시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 자본진출, 인적 이동의 높은 수준에 비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인권, 전쟁과 폭력, 빈곤과 기아, 환경 등 국제문제”에 관한 “신문·방송, 학생 지식인, 시민단체 등 여론을 주도하는 사회 계층이나 집단”의 “인식의 넓이가 좁고 깊이가 얕다”는 것이다(신윤희 2006, 167). 아시아연대 활동가들도 한국 사회 전반의 지적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역 이해 부족은 서로 연관된 문제이다. 연대 상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자민족중심주의를 낳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자민족중심주의가 연대 상대로부터 배울 기회를 차단한다. 양영미(2010.12.26) 씨는 아시아에 대한 “무지가 무시를 낳는다”고 보았는데, 거꾸로 무시가 무지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 활동가들이 아시아를 탐구와 학습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는 추정이다. 김찬호 씨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연대를 “매우 시혜적” 사업으로 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2011.01.02), 이는 아시아가 ‘지혜의 중심’이 아니라 ‘낙후의 변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대는 이웃의 해석과 전략, 그리고 대안적 발전구상을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시간과 자원과 노고가 많이 투입되는 데 배움이 따르지 않는다면 참으로 아까운 노릇이다.

2. 과제

(1) 가치구현과 교육훈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년 설문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8년에 한국의 국제협력 관련자 310명을 대상으로 시도한 설문조사결과는 아시아연대운동의 과제에 관한 현장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설문응답자들은 국제협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아시아지역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6.8%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꼽았는데 2등을 차지한 유럽지역(19.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협력분야 중의 선호도는 “민주주의와 평화증진 등의 가치구현”이 1순위(32.3%), “인도주의적 구호와 지원”이 2순위(27.4%), “상호이해 및 문화교류”가 3순위(23.6%)였고, “경제 및 개발분야”가 4순위(11.4%)였지만, “재정지원”은 5순위(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정옥·김상돈 2008, 201 표26).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교류협력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상호이해” (36%), “전문가교류 및 새로운 정보수집” (21%), “민주주의 가치 구현” (17%), “국제사회에서 위상강화” (15%) 순이고, “경제적 이익” (7%)은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다(214 표30).

가장 효과적인 국제협력프로그램으로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62%) “재정지원”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1%). “인적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선택한 응답자(10%)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205 표27). 교육훈련이 빠진 단순한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가치를 적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같은 기관에서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등 10개국 1,4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아시아 시민사회 수요조사(이정옥·권대근 2008)에서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관련 기관 근무자와 관련 연구자들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의 응답자들은 자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국제협력 방식으로서 교육훈련을 압도적인 1순위(77.1%)로 꼽았고,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1순위(20.8%)로 꼽았으며, 재정지원도 효과적이지 못한 프로그램 2순위(13.2%)에 올랐다(이정옥·권대근 2008, 314, 319).

다소 엇갈리기도 하지만 한국 측이나 아시아 이웃의 국제협력 관련자들이 전반적으로 아시아연대를 통하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상호이해를 돕고, 교육 훈련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에 관한 책무의식과 기대가 높고, 경

제적 이득 추구, 재정 지원, 단순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문조사가 알려주고 있다.

(2) 성찰-체험-공감-이해: 논평 분석과 인터뷰 조사

아시아연대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비평들이 제시한 과제는 ‘성찰’, ‘체험’, ‘공감’, ‘이해’라는 서로 연관된 단어들로 종합할 수 있다. 우선, 논객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기본으로 요구한다. 국제연대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여는 것이 연대의 기초”라는 것(곽은경 외 2000, 33의 윤영모 씨 발언)이고, “자기 뿌리와 바탕에 대한 계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앞의 글 34의 장소영씨 발언). 동아시아연대를 위한 “탈민족주의적 상상력”이 주문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남주 2006, 365). 심지어 태국 네이션지(*The Nation*) 기자까지도 아시아연대운동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을 성찰하고 한국사회가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프라빗 로자나프록 2006, 55).

두 번째로 국제연대를 위해서나 아시아연대를 위해서나 체험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의 직접교류를 통하여 “정서적인 공감도 강해져야” 연대가 강화된다거나(곽은경 외 2000, 24 장소영씨 발언), “국가에 의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부유해지는 동아시아를 만들려면 결국 사람들이 부딪히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서 “손에 잡히는 체험과 실감으로 다가오는 아시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이기호 2006, 37), “작지만 더 많은 행위자들의 실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국가라는 틀보다는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이 살아 숨 쉬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기호 2010, 207)이 같은 맥락에 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상대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요구한다. “개별자(상대: 인용자)에 대한 이해는 연대 형성을 맺기 위해 필수적”(조한혜정 1998, 167)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최대의 과제”라는 것이

다(박명희 2006, 140).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진영 20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 운동이 자원과 관심의 결핍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 자민족중심주의에 사로잡히고 지역이해는 부족한 편협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담론을 통하여 근본적인 과제로 주문되는 바는 한마디로 아시아연대운동이 다분히 성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와 같은 공동의 가치 구현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지적 향상과 이해의 심화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기존에 제시된 비평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견이 없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현장에서 호소하는 문제와 비평이 제안하는 과제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이다. 과제 설정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장의 고충해소방안과 결부되어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안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법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이다. 효과적으로 제안하려면 직설적인 진술방식과 구체적인 사업제안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심화를 위하여 문제와 과제를 다음 장에서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다.

III. 문제와 과제의 재해석

1. ‘문제’와 ‘과제’의 연계

아시아연대 운동의 과제가 일반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자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책무의식에 이끌려 아시아연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자원부족형 연대운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운동을 벌이되, 장기적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활동가를 육성하는 아시아연대

무엇보다 먼저 물적 자원의 결핍보다 심각하다는 인적 자원의 결핍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때 인적 자원의 부족은 국제연대활동가의 양적 결핍뿐만 아니라 질적 결핍도 포함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시아연대운동의 담당주체는 각별한 능력과 감각이 요구된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대중적 기반이나 운동적 기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운동 경험과 감각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자민족중심주의를 뛰어넘는 아시아적 감수성과 정체성도 요구받는다.

인적자원결핍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전략회의에서 김기식 씨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남는 아시아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즉 연대사업의 고안 및 추진에 있어서 활동가의 교육훈련과 차세대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성이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창대한 국제연대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활동가가 훌륭해야 연대사업도 훌륭해질 것이다. 국제연대활동을 통하여 활동가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연대활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시아연대운동을 당장 잘하기 위한 고민이 압도하겠지만, 연대운동 과정에서 우리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받고 운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차세대 활동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연대활동가 대다수가 아시아 현지연수 경험이 없고 아시아 언어도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시아연대를 위한 특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시아연대 활동가의 양적 결핍 문제는 시민단체의 내적 유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시아연대사업이 국제연대부서 활동가들의 전문분야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필요

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대부분 국제연대와 국내사업을 구분하는 분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연대와 국내사업의 이분법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틸틈이 주장해왔다. 심지어 국제연대부서나 전문담당자 제도를 없애야 국제연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단체들은 국제연대부서를 만들고 연대업무를 소수의 상근 간사에게 맡겨둔다. 참여연대처럼 규모가 큰 단체도 국제연대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명의 간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업구조에 안착해서는 아시아연대의 인적자원 부족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 아시아연대는 국제연대담당 활동가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활동가들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연대가 분야별 전문성, 이를테면 평화군축, 의정감시, 사법감시, 경제정의, 분배복지 영역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어야지 그러한 내용과 분리된 별개 활동가들의 일로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분리가 불가피하더라도 유기적인 내부협력이 필수적이다.

(2) 대중적 관심을 산출하는 아시아연대

아시아연대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 문제는 운동의 대중성 부족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제연대는 소수 연대전문 활동가들의 전문적 작업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대중적 국제연대란 다소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주로 ‘우리 안의 아시아’ 혹은 ‘다문화 사회’라고 불리는 현상을 기회로 삼아 아시아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성사시킨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필자가 이미 서남포럼의 백서를 통하여 소개한 바 있다(전제성 2006a; 2006b).

아시아연대사업의 대중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편은 활동가 중심성을 유지하되 대중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활동가 중심적이되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추진한 대외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모니터링 사업을 선례로 삼아볼 만하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ODA를 계속 증액하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나라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손혁상·최정호 2008).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현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관한 모니터링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다른 OECD 국가의 시민들처럼 한국 시민들의 관심도 의외로 높다(손혁상 2006).

이와 유사한 발상으로, ‘아시아외교’, ‘아시아교육’, ‘아시아보도’에 관한 3대 모니터링 사업을 추가 제안하고 싶다. 먼저 ‘아시아외교 모니터링’ 사업에 관한 것이다. 박은홍(2004) 교수가 버마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염원과 압력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인권외교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나, 한국 시민사회가 “외교분야의 민주화와 국민참여형 국제관계 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효제(2005) 교수의 주장을 참고할 만하다. 외교관계의 민주화와 국민참여형 국제관계 모델의 개발을 한국의 아시아외교 모니터링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더구나 현 정부가 “신아시아외교”(New Asia Initiatives)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적절하다. 안청시 교수의 해석처럼 “대한민국의 존립은 외교와 무역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 잠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야가 ‘주변4강’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미디어와 교육의 책임이 크다. 시민사회 아시아연대운동은 외교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러한 잠재적 관심과 실제적 관심의 격차를 파고들어야 한다.²⁾

2) 최근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실행위원회에서 “외교감시”를 2011년 신규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외교감시의 영역에 아시아 지역과 자매결연사업이나 교류방문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지방외교”(장세길 2007)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외교감시사업은 지방의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사사키 이치로(1998, 136-38)의 주장처럼 동아시아연대가 “광범위

이때 관찰되어야 할 외교는 양자(bilateral)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multi-lateral)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정부가 깊이 관여해온 동아시아 지역협력(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박사명 2006; 박사명 외 2008; 2009; 신윤환 2008)의 진전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아시아 연대운동단체들은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부 간 지역협력을 정치적 기회구조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남주(2006)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개발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협력의 진전에 비해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사회 문화적 민간교류가 크게 뒤쳐져 있다”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박은홍(2005) 교수도 “정부간 협의체인 아세안(ASEAN)+3(한·중·일)가 부상하고” 있지만, “자국중심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제교류의 심화”일 뿐이므로, “아시아 시민사회 간 연대가 정부 간 공동체 논의를 감시, 견제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일찍이 촉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몇몇 예외적 인물들을 제외하고 아시아연대 참여자들과 비평가들 대다수가 아시아의 정부 간 다자관계의 진전에 관하여 둔감하거나 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로, ‘아시아교육 모니터링’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아시아연대는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점검하는 성찰을 수반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다. 지역전문가, 교사,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교과서에 서술된 아시아에 관한 내용과 비중의 적절성을 점검해보자. 이때 대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점검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빼놓아

한 생활 지역 차원으로 뿌리를 내려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려면 지자체의 사업과 시민사회의 비전을 결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외교감시사업이 그러한 전략의 시작일 수 있다.

서는 안 된다. 아시아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교육과정도 심각한 편향으로 불구상태를 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전제성·이재현 2008; 전제성 2010b). 한국사회는 교육에 대해 각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연대운동이 한국의 교육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대중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시아관련 미디어 모니터링’도 제안하고 싶다. 미디어 비평가들과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대중적 영향력이 큰 TV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하자. 아시아 관련 보도, 기록영화, 극영화 등의 편성 비중을 점검하고, 발견된 편향성에 관한 비평과 주기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부터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아에 관한 충분한 양과 적절한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시아연대운동이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는 전제를 따른다면 이러한 세 가지 분야의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사업이다. ‘국제연대는 국내연대’라는 관점에서 외교, 교육, 미디어에 관심을 둔 단체 및 학자들의 협력을 구하고 공조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을 수행할 때 외교, 교육, 미디어의 영역에서 시행된 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시행되지 않은 바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권력론을 활용하여 표현하자면, “권력의 두 얼굴”, 즉 “결정”(decision)뿐만 아니라 “비결정”(nondecision)의 측면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Bachrach and Baratz 1962).

(3) 알뜰한 연대방식의 고안

우리 시민사회의 국제연대활동은 서양에 비하면 자금이 부족하므로 수준에 걸맞은 연대방법을 추진하되, 그렇게 고안된 저비용 연대수단의 장점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적합한 저비용 연대수단을 제공하고 연대의 흔적이 누적적이고 공개적이라는 장점도 지닌다. 환

경운동연합이나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교류의 공간을 만드는 실험을 일찍이 시작하였으며,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한·중·일 환경정보교류 사이트는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 필자가 각별히 소개한 바 있다(Jeon 2008).

또 하나의 저비용 연대방안은 대화와 토론이다. 필자는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활동을 제안했을 때 큰 자금을 기대하는 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를 접해본 적이 없다. 그 대신에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한국의 활동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물주’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에서 ‘상상된’ (imagined)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이웃들이 우리를 친구로 여긴다면 우리도 친구가 되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만남과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친구처럼 듣고 이야기하고 다투자. ‘돈’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함께 어울리며 노는 연대활동을 전개하자.

그런데 가끔은 직접 만나야 한다. 만나야 친분도 깊어지고 긴 이야기도 가능하다. 만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그들을 꼭 한국으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토론장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시아연대의 문제는 무주공산이 문제이다. 아시아연대에 있어서 리더십이나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다”(이성훈 2006.07.18). 그렇다고 한국이 나서서 이끌 수 있을까? 그래야 된다는 태국의 노동운동가도 만나봤고(Somyot 2006.07.19), 인도네시아의 전직 장관님의 말씀도 들었다(Anwar 2009). 그러나 지금까지 밝힌 한국 시민사회의 여러 한계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회의에 아시아 활동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아시아의 다른 단체가 주관하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토론장에 한국의 활동가가 참가하고 적극적인

로 활용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니 아시아의 활동가들을 부를 자금이 없다고 한숨 쉴 필요가 없다. 저비용 고효율의 회합장으로 아시아시민사회연대회의(SAPA: Solidarity for Asian People's Advocacy)를 권하고 싶다. 동남아 시민사회 네트워크단체들이 주도하여 창설한 이 회의는 미숙하고 한계가 분명하지만 적어도 우리 활동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수백 명의 아시아 활동가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으며, 분야별 회의에서 전문적 네트워킹을 심화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동남아 시민사회가 아세안(ASEAN)이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대하여 수행하는 '비판적 협력', 즉 개입의 정치(politics of engagement)에 대해서도 한 수 배울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전제성 2007a; 2007b).

2. '추상적 품성론' 을 넘어서

과제에 관한 주장들이 '추상적 품성론' 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매우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권고이고 아시아연대운동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들이지만, 대체로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이어서 일종의 '품성론' 이라 할 수 있고, 고급스럽고 완곡한 언술에다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비판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못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연계되기 어려워 보인다.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벗어나자는 발언을 반복하는데 있지 않다. 더 직설적인 문제제기와 더 구체적인 과제설정이 필요하다.

(1) 연대활동수칙(?)의 제정

만약 권고가 품성론을 취하려면, 직접적이고 당장 실행가능한 일종의 '연대활동수칙' 부터 개발해보자. 동남아 활동가들로부터 한국 시민사회와의 공조경험담을 들어보면, 문제는 아시아에 대한 감수성 이전에 대체로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사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필자가 대신 사과해야만 했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프로그램에 초대해놓고 사전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음식제공에서 무슬림과 채식주의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불러놓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한다. 한국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토론 기회가 적다. 한국의 시민사회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쏟아놓는다. 현지를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멀리까지 와서 잠시 들렀다가 금방 떠난다. 동행한 통역도 엉망이고 이런 상황을 보완할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해오지 않는다. 여러 차례 왔는데 올 때마다 우리 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복해서 묻는다.…….

한국 측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험담들은 이렇게 간단하고 직접적인 예의에 관한 것이므로, 연대수칙을 만들고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개선안을 지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학습을 통한 자민족중심주의 극복

만약 우리 시민사회의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체험’을 통한 ‘공감’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매년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활동가들과 빈번하게 만나고 있다. 종종 특별 여행단을 구성하여 교류 방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심지어 장기연수자를 아시아 현지로 보내거나 현지로부터 받아들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세트’ 로서 5·18기념재단의 국제사업을 바라(나간채 2009; 김성현 2010).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체험을 통한 공감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족중심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체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자민족중심주의는 극복했다는 것이다. 무슬림에게 술과 돼지고기가 금기라거나, 인도네시

아 사람들에게 원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피상적인 문화와 행태 및 규범에 관한 유의사항을 체득하였고, 주로 관계하는 단체의 실정과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연대하려면 상대를 더 알아야 한다는 느낌도 받고 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학습’이다.

자민족중심주의는 학습으로 극복되는 것이다. 필자가 업으로 삼는 정치학에서는 비교정치연구가 자민족중심주의의 해법으로 일찍이 제시된 바 있다. 자민족주의에서 해방되는 길은 마치 비교정치연구자들처럼 반복적인 비교연구를 통하여 비교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도간·펠랏시 1985, 1장). 자기성찰은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거울’을 봐야 하고 타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한국을 보려면 타자, 즉 외지의 거울에 비추어봐야 한다. 비교의 거울은 지식의 거울이고, 그 지식은 다른 지역의 지식(local knowledge)인 것이다. 체험도 이러한 지식축적의 한 방편이고 시작으로서 적절하지만 그것만을 통해서만 표피적인 지식 이상을 얻을 수 없다.

(3) 활동과 지식의 연계

자민족중심주의가 고질적인 이유는 지역 지식이 고질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지역연구 연계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시아연대에서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인용자)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거나(이남주 2006, 365), “(동아시아의: 인용자) 다자간 협력의 틀에서는 지식인들의 교류와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이기호 2010, 203).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전형적으로 활동가와 전문가 사이의 연대를 추구해왔고, 전문가로서 변호사와 함께 학자들이 연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활동가들이 함께하기 쉬운 동조적인 학자들 위주로 조직하는 경향이 농후했고 ‘국제통’이 아니라 ‘국내통’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조직하면서 지역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구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필자는 일국적 사회운동을 위한 ‘일반적’ 전문가 네트워킹이 아니라 아시아 연대를 위한 ‘특수한’ 전문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시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지역연구자와 국제관계학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좀처럼 전방에 나서고자 하지 않을 것이므로 활동가와 전문가 사이에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 재단, 정부기관은 지역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기획, 강연, 심사 요청을 매개로 지식을 활용하곤 한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연구자 접촉에 소극적이다.

지역연구자들, 특히 한국에서 소외된 지역을 연구하는 이들은 자기 전공 지역에 관하여 이야기할 공간이 마련된다면 어떻게든 반응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만나 도움을 청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다만, 연구자들이 의외의 발언이나 단체의 입장과 다른 각도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름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시아의 단체와 활동가들을 접촉할 때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시아 연구자들을 만날 때도 필요한 덕목인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활동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활동가와 다른 가치를 목표로 삼고 다른 선호도를 지니고 있다. 연구자와의 공조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4) 예비지역전문가 네트워킹

시민사회가 차세대 활동가의 육성에 신경을 쓰듯이 차세대 지역연구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비지역전문가들을 자원활동가(자원봉사자)로 영입한다면, 연대운동단체의 인적자원 결핍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지닌 연구자 산출에 기여함으로써 차세대 활동-지식 연계의 전도를 밝힐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에서 자원활동가의 충원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과서적 지침이지만 잘 실현되지는 않는 것 같다. 국제 활동에 관심과 포부를 지

년 대학원생, 대학생, 심지어 고교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 사회 국제연대활동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연대활동가들은 인근 대학의 국제학부, 동양어관련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대학원에 해마다 공문을 보내고 일부는 직접 방문하여 아시아연대운동을 소개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현지에 체류하면서 연구 중인 대학원생들을 수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현장 감각과 실행력을 지닌 자원활동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원활동가들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현지 연구와 학술적 조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대상대국의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언어권별 1명 이상 구할 것을 주문한다. 영어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이 국제업무의 당연지사처럼 여겨져서는 아시아연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아시아인들끼리 영어로 소통하면서 겪는 소외감을 포함하여, ‘언어 장벽’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 이웃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이 육성되는 연대’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과로에 처한 활동가들이 학습을 통해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안일 수 있다. “국제연대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투자도 어려운 실정”이라면(김찬호 2011.01.02), 더욱 비관적이다. 그렇다면 당장의 해법으로 활동가들이 지역연구자나 예비지역전문가와 사귀고 놀고 대화를 많이 하라는 안을 내놓고 싶다.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학습의 길이 열리고 현장과 지식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3. 한국과 아시아의 특수한 접점을 찾아서

‘성찰’도 필요하지만 ‘실천’도 필요하다. 성찰의 필요성은 한국의 아시

아연대운동이 성급하게 이런 저런 사업을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옳다. 그런데 연대를 실천해야 연대를 성찰할 수도 있다. 모 대학 총장을 지낸 신부가 즐겨 썼던 표현을 빌자면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를 배운다”. 피아노를 쳐야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사회운동을 ‘수출’ 하기 위한 연대의 실천도 학습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래야만 수출이 왜 잘 안 되는지, 한국 알리기를 제대로 하려면 현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 목적에 따라야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 측의 수요도 확인된다(이정옥·권대근 2008; 양초희 2008, 31; 풍키 2010; 수실 파큐렐 2010).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운동권의 한류’ 현상도 활용해서 아시아 활동가들과 만나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환상’ 이 없다면 ‘깨달음’ 도 없다.

이때 적어도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도를 구분하여 ‘한국형 아시아연대운동’ 을 개발하고 실험해 보자는 안을 추가하고 싶다. 자민족중심주의 극복의 주문은 한국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교적으로 인식하라는 것이다. 아시아연대활동이 제공하는 비교를 통하여 우리를 더 잘 보게 되고 우리에게 대하여 말할 필요를 더 느끼게 된다. 그렇게 확인된 한국 시민사회의 강점은 아시아연대현장에서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일방적 독백’ 이 문제인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알리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을 목적으로 할 때 문제인 것이다. 연대현장에서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시민사회를 알고 싶어 하고 질문을 쏟아놓는데 어떻게 가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렇게 확보한 지식으로 그들도 자신들의 자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비교의 거울’ 을 볼 기회를 누려야 하는 것이다. 자민족중심주의의 극복이란 것이 곧바로 지역을 비월하여 ‘보편주의’ 로 향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과 ‘아시아’ 의 특수한 접점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1)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적 인식

비교의 기본적인 방법은 일치와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다(밀 1997). 그런데 정서적 공감, 공동 목표, 공동 사업이 강조되다보니까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그러다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가치 있는 차이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는 일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차이에 의해서도 촉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테면 태국의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는 장소영 씨는 “사회의 뿌리”인 “주민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가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면서, “이웃과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대안적 삶의 조직화 가능성을 아시아에서 발견하였다(곽은경 외 2000, 34).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고(故) 이성경 씨는 다양한 지역단체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펼쳐 보여준 수라바야(Surabaya) 지역노동운동의 강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감탄하면서 한국의 지역노동운동이 그러하지 못함을 토로하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런 간과처럼 아시아의 이웃들은 우리들에 비하여 지방의 풀뿌리운동이 강하고, 대안적 발전 모델 추구의 잠재력이 크다.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이 자부하는 고속성장이 유발한 상실들 중에 일부일 것이다.

또한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국제화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도 쉽사리 알아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가수와 정부뿐만 아니라 활동가를 ‘수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제협력에 능한 활동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에서도 민주주의 수준이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활동가들을 배출하였으며, 항공의 교차로인 방콕은 다양한 초국가단체들의 본부가 자리하고,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는 국제연합(UN)의 각종 산하기구 지부들이 설치되어 현지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시아의 나라들이 대부분 수백 년

간 서양세력에 노출되었는데 반해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아마 먼 원인일 것이지만, 1990년대 초반에서야 가능하게 된 한국의 UN가입과 여행자유화를 가까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UN 가입으로 비로소 UN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초대될 수 있었고, 여행자유화조치 덕분에 활동가들이 외국단체의 초대에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국제화는 20년 정도 진행되었을 뿐이기에 당연히 국제연대의 구력이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시민사회에 비해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잘 했고 잘 할 수 있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겸손한 아시아 활동가들이 발견하고 종종 들려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국 사회운동은 전투적인 시위기법을 잘 발달시켰다고 평가받는다(Tek 2006.07.18). 노동조합조직의 측면에서 한국은 덜 분열적이고 진보적 정당과의 연대성이 돋보인다고 한다(Simon 2010.12.27). 한국 시민사회가 운영자금을 국제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부에서 동원하는 데 성공적인 점이 흥미를 끈다고 한다(Poengky 2011.01.07). 한국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아시아에서 선진적으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구현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Suciwati 2010.07.25; Usman 2010.01.05). 일본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다(히로세 2006). 모두 비교의 결과이다. 이러한 비교 성찰을 통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바와 거꾸로 도움을 받을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정에 맞고 특색이 있는 창조적인 연대운동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하나의 응용문제: ‘아시아 권력감시’

민주주의 진전은 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의 염원 중에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5·18기념재단이 광주항쟁 30주년을 기하여 출범시킨 아시아민

주화운동연대(SDMA: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관련보도 김성현 2010))의 사업으로 ‘아시아 권력감시’ 운동을 제안하였다. 광주에 초청된 아시아 활동가들과 함께 ‘행정감시’, ‘의정감시’, ‘사법감시’ 등 세 분야의 활동공조를 제안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 분야 중에서 사법감시 사업이 아시아의 활동가들에게 신선하게 수용되어 가장 먼저 방법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양영미 2010.12.26). 성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조를 제안하고 실천에 나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과 아시아 이웃을 비교적으로 인식하고 특수한 점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력감시운동을 하나의 ‘응용문제’로 삼아 특수한 점점을 찾는 과정상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여기서 밝히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는 정치체제 다양성이 아주 큰 지역이라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폐쇄적 권위주의 등 가능한 체제유형이 모두 존재하고(Diamond 2002), 군부독재, 일당체제, 절대왕정 등 폐쇄적 권위주의의 다양한 하위체제들이 엄존한다. 선거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에 속한 일부 국가들 뿐으로,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만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선거와 의회활동에 관한 모니터링이라는 정치 전략은 적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한 정치체제 간 맥락의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고, 특히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텨내고 있고 민주화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주의의 생존력”과 제도의 작동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Slater 2008).

둘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그 속에서 어떤 대안적인 정치조직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관한 관찰이 필요하다. 즉 ‘권력감시’ 뿐만 아니라 ‘사회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대안적인 정치세력화의 결여가 민주화 과정에서 구체제 세력의 부활과 복귀를 허용할 수 있고, 우리 활동가들에게는 민주화를 관찰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

치사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당의 중요성은 민주화 이후 더욱 증대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는 물론이고 비정부단체(NGO)의 관심 속에 정당의 자리는 없다.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스스로의 ‘영혼’을 구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민주화는 권위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세력으로 대체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적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국가건설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작업을 요구한다(Carothers 2002). 이행기의 민주주의 창설과 새로운 국가건설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이행이 종료되고 이미 형성된 제도 속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성격의 일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즉 권력감시운동이란 정태적인 일상활동에 부합하므로 동태적인 이행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³⁾

넷째, 민주화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종교적·종족적 균열이 심한 나라의 경우 수평적 폭력의 폭등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종족분쟁이나 종교갈등을 완화할 제도적 디자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다원사회(다문화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해 둔감하고, 그 제도적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나 합의제 모델(consensus model; Lijphart 1999)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고 응용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근원적(primordial) 갈등과 해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시아

3)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이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역동적인 제도화의 영역이 이행기 정의이다. 우리에게 ‘과거청산’ 작업으로 알려진 이행기 정의는 구체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아시아는 국가폭력의 규모가 큰 지역이다. 따라서 아시아 도처에 과거청산의 유제들이 널려 있다. 과거청산작업은 이행기에 가동되어야 하는 역동적 작업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와 지혜의 결집에 한국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다원사회의 활동가들로부터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면 시들어 갈 것이다. 권력감시운동은 헌정제도의 정상작동을 위주로 살피면서 복지문제는 포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삶에 이바지하는 아시아민주연대를 위해서는 복지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의료 관련 복지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아시아의 개도국에게 있어 복지정책은 먼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10여 년 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때 널리 애용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용어는 복지문제의 다른 표현이었다. 탁신(Thaksin Shinawatra) 수상이 2000년대에 태국에서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복지체계 개혁구상 덕분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총선에 이어서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복지문제였으며, 작년부터는 사회보장시스템 개혁에 관한 열띤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개발형 NGO들이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이란 것도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을 아시아의 동시대적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국 시민사회 주창 NGO들의 태도는 잠재적으로 성장, 민주화, 그런 뒤에 복지라는 단계론적 개발주의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창형 NGO와 개발형 NGO(혹은 “복지-구호형 NPO”: 조효제 2005) 사이의 상호침투와 연계된 과제설정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후속연구제안

아시아연대운동의 현장에서 활동가들은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과 사회적 무관심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고, 비평가들은 우리 시민사회의 자민족 중심주의적 편협성이 문제라고 질타하고 있다. 과제로서 활동가들은 교육

훈련과 같은 인지적 향상과 민주와 평화로 압축되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선호하였고, 비평가들은 아시아에 대한 체험, 공감, 이해로 이어지는 성찰적 과정을 출로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설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사람이 남는 연대,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연대, 아시아의 친구가 되는 연대를 제안하였고, 추상적 품성론을 넘어서 지역지식의 네트워킹과 학습을 통한 비교적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편협성을 극복해 가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본 연구는 부족한 조사와 도전적 주장의 모순적 결합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연대운동 연구의 서설에 불과하다. 연구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하여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왜 아시아인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김기석 외 2008, 297에서 백영서).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추구하는 선봉에는 탈냉전에 자극받은 인문학자들이 있었다. 경제위기와 지역협력의 심화를 계기로 사회과학자들이 합류하면서 탐구의 분야가 확대되고 논의가 다양해졌다. 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운동은 이런 담론의 흐름과 직접적 연관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10여 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활동가들이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둘째로, 다양한 아시아연대운동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조사나 심층적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서남포럼의 백서에서 소개된 것처럼, 아시아연대운동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사업성격이나 견해의 차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연대운동의 현황과 추이에 관한 조사가 5년에 한 번 정도는 수행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 5·18기념재단에 대한 사례연구(나간채 2009)나 정신대 관련 국제연대사업 사례연구들(정진성 2002; 곽진영 2006)처럼, 특정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이 심층 연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로, 아시아연대운동에 대한 아시아의 요구와 반응에 대한 조사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연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

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진했던 민주주의 국제연대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수요조사(이정옥·권대근 2008)가 출발점을 제공하였지만, 아시아 활동가 인터뷰 조사, 연대활동 참여관찰, 이미 추진된 특정 연대사업의 효과에 관한 심층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지역인권협력의 희소한 토론장에 관한 평가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시민단체연대회의(SAPA)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광주아시아포럼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하여 3차까지 수행된 발리민주주의포럼(Bali Democracy Forum)같은 네트워크 활동들에 관한 조사와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이성훈 2011). 아울러 2010년 3월에 정식 출범한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라펜디 2009; 이성훈 2010)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앞으로 아시아인권협력체제를 구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고, 당장은 동남아의 인권문제 개입을 위한 접근법과 효과적인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동참하는 아시아 지역연구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와 현지 시민사회 양측의 필요에 응답하는 이중의 헌신(commitment)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지역연구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천적 가치도 추구한다. 그 실천적 가치는 정부정책수요 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더 커질 수 있다. 아시아연대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연구자들과 예비지역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네트워킹과 문제의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절실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사례를 발견할 수 있고 조사과정의 고독을 극복하는 동행을 얻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참고문헌

- 곽진영. 2006. “동아시아 거버넌스와 NGO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국적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3).
- 곽은경·윤영모·이성훈·장소영·조효제. 2000. “긴급좌담/지구화 시대의 국제 NGO 운동: ‘아셈 2000 민간포럼’ 과 그 이후.” 『당대비평』 13.
- 김기석·박승우·백영서·이남주·이재현·조희연. 2008. “좌담: 한국에게 아시아란 무엇인가.” 『시민과 세계』 13.
- 김영래·이화수·이기호. 2001. “비정부조직(NGO)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미국.” 『국제정치논총』 41(4).
- 김성현. 2010. “광주정신, 세계에 알리자: 亞 민주화네트워크 출범.” 『조선일보』 05.17.
- 김혜경. 2000. “OECD 회원국의 개발NGO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조효제 편역. 『NGO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 나간채. 2009. “5월 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9(2).
- 도간, 마테이·도미니크 펠랏시. 1985. “에스토센터리즘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비교.” 최명역. 『비교국가론: 비교정치의 전략』. 법문사. 1장.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라펜디 자민. 2009. “아시아의 인권기구에 관한 현재적 논의: 아세안현장에서 인권기구까지.” 『아시아저널』 창간준비호.
- 밀, 존 스튜어트. 1997. “비교의 두 방법.”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1』. 열음사.
- 박경석. 2006. “재외동포 단체.”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이매진.
- _____. 황인원·권 율·채수홍·이재현·전제성. 2008. 『위기에서 협력으로: 동남아 지역 협력의 확대와 심화』. 이매진.
- _____. 이한우·권 율·채수홍·이재현·전제성·조영희. 2009. 『협력에서 공동체로: 동아

시아공동체의 동향과 과제』. 이매진.

박명희. 2006. “한국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의 동아시아연대운동.”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 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박은홍. 2004.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외교: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외교적 제재의 타당성.” 『기억과 전망』 겨울호.

_____. 2005.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과제: 아시아연대를 중심으로.” 광주국제평화캠프 국내 평화인권활동가대회 기조발제문(05.14).

박진영. 2005. “아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노동사회』 101(7-8월).

_____. 2006. “여성노동운동의 아시아연대와 한국의 역할.” 서남포럼 2006년 공개토론모임 발표문.

백영서. 2006. “서언.”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백지운. 2010. “학술대회 강평기: 인하대 국제학술회의 - 동아시아 ‘국제주의’의 복원을 위하여.” 『교수신문』(12.06).

사사끼 이치로. 1998. “협력 공동의 동아시아 세계 형성: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언.” 『당대비평』 5.

서남포럼. 2005. 『동아시아 연대운동의 현황과 전망』. 서남포럼 공개토론모임 자료집.

_____.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손혁상. 2006. “우리는 OD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대의원조 (ODA)정책 칼럼.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7498> (검색일: 2011.01.10).

_____. 최정호. 2008. “한국의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동남아시아연구』 18(2).

수실 파큐렐. 2010. “정의와 평화의 연대는 우리 모두의 책임.” 『주먹밥』 29.

신윤환. 2006. “결언.”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_____. 2008. “활발한 한-아세안 정부간(‘트랙1’) 협력과 시민사회의 무관심.” 『서남통신』 (11.25).

양영미. 2009.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운동.”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국제연대 실무

- 포럼 발표문(02.26).
- 양초희. 2008. “5·18기념재단 국제인턴 활동 보고서: 태국, 포럼아시아.” 5·18 기념재단.
『국제인턴과견 활동보고회 자료집: 오월의 눈으로 아시아를 보다』. 5·18 기념
재단.
- 오재식·유재현·전제성. 2007. “좌담:亚太권신장 민주연대,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경향신
문』 09.30.
- 이기호. 2006. “동아시아 활동연대 체험기.”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_____. 2010.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동향과 전망』 78.
- 이남주. 2006. “한국에서의 ‘진보’와 동아시아 협력.” 『창작과 비평』 34(3).
- 이성훈. 2010. “아세안 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나눔과 시민사회』 3.
_____. 2011.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 부러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외교.” 『나눔과 시민
사회』 11.
- 이정옥·권대근. 2008. 『민주주의의 지구화와 아시아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_____. 김상돈. 2008. 『민주주의의 지구화와 한국의 현실 진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장세길. 2007. “친선교류에서 지방외교로: 전라북도 사례로 본 지방외교의 형성과 변화.” 『사
회과학연구』 16(1).
- 전제성. 2006a.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연대활동 현황과 평가.”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
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_____. 2006b. “한국 인권운동의 동아시아 연대활동 현황과 평가.”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
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_____. 2006c. “동아시아연대운동의 현황과 전망.” 서남포럼 2006년 공개토론포럼 발표문.
_____. 2007a. “동남아의 참여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동남아시아 연구』 17(2).
_____. 2007b. “동남아 시민사회의 참여적 지역주의.” 『서남통신』 (05.10).
_____. 2008. “아시아 연대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경희대학교 대학원보』 161(10.28).
_____. 2010a. “5.18과 국제연대.” 『주먹밥』 29.
_____. 2010b. “우리 대학은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프레스리안』 (11.18).
_____. 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

아연구』 18(2).

정진성. 2002.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군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1).

조한혜정. 1998. “아시아 지역의 페미니스트,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당대비평』 5.

조효제. 2005. “시민사회, 재앙극복 국제연대에 나서라.” 『시민의신문』 01.03.

조희연. 2008. “‘사회적 아시아’를 향한 상상.”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편. 『우리안의 아시
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해피스토리.

퐁키 인다르티. 2010. “연대의 시작은 인권운동가 보호부터.” 『주먹밥』 29.

프라빗 로자나프록. 2006. “아시아에 천천히 문을 여는 한국.”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운동
단체 백서』. 아르케.

히로세 토시아. 2006. “동아시아에서의 환경연대운동.” 서남포럼.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
서』. 아르케.

Anwar, Dewi Fortuna. 2009. “Vision for East Asian Community: Indonesi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the 12th ASEAN Forum orgaized by KISEAS, *Vision for East
Asian Community: Searching for Korea-ASEAN Partnership*, 15-16 May, the
Shilla Jeju Hotel.

Bacharch, Peter, and Morton S. Baratz. 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4).

Carothers, Thomas.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Diamond, Larry Jay.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Jeon, Je Seong. 2007. “‘Asian Solidarity’ Movements of Korean Civil Society: The Dream,
Challenge, and in the ‘Mirror’ of Southeast Asia.” Paper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yoto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_____. 2008. “ICT and Asian Solidarity Networking: A Case Study of Korean NGOs.” Sun Sun
Lim, Raymund C. Sison, and Dong-Yeob Kim, eds. *The Promise of ICTs in
Asia: Key Trends and Issues*. Seoul: Jimoondang.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later, Dan. 2008. "Democracies and Dictatorships Do Not Float Freely: Structural Sources of Political Regimes in Southeast Asia." Erik Kuhonta, Dan Slater and Tuong Vu, eds. *Southeast Asia in Political Science: Theory, Region, and Qualitative Analysi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인터뷰

김찬호. 2011.01.02(이메일). 5·18기념재단 교류지원팀장.

나효우. 2006.03.20. 아시안 브릿지 운영위원장.

양영미. 2010.12.26(이메일).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이성훈. 2006.07.18. 포럼아시아 실행소장.

Lek(Junya Lek Yimprsert). 2006.07.20. 태국노동캠페인 대표.

Mustapawalad. 2007.11.26(이메일). 인도네시아 반폭력운동단체 Kontras 아제지부 활동가.

Poengky Indarti. 2011.01.07. 인도네시아 인권옹호단체 Imparsial 소장.

Rini Kusnadi. 2010.12.29. 인도네시아 국가폭력피해자단체 IKOHI 활동가.

Simon. 2010.12.27.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KASBI 국제부장.

Somyot. 2006.07.19. 태국 노동정보센터 소장.

Suciwati. 2010.07.25. 인도네시아 인권운동단체 TIFA 활동가.

Tek(Wilaporn Jitprasan). 2006.07.18. 태국 빈민운동연합 활동가.

Usman Hamid. 2011.01.05. 인도네시아 Kontras 전 대표.

ABSTRACT**Problems and Tasks in ‘Asian Solidarity Movements’ of Korean Civil Society****JEON Je S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ough Korean civil society turned their international focus to ‘Asian solidarity’ a decade ago, academic papers on that issue are rare.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and evaluate the problems and tasks in ‘Asian solidarity movements’ of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 the method of survey results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activists interviews. The problems of Asian solidarity activities initiated by Korean civil society are defined to lack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 lack of social attention, lack of understanding on Asia, and ethnocentrism. The tasks are summarized to pursuit of common value such as democracy and peace, activists’ training, and reflection through experience-sympathy-understandings on Asia. Author reinterprets the problems and tasks, then suggests several concrete and immediate programs from the principles such like activist-first activities, public attention mobilization, local knowledge networking, comparative studies, and Korean-Asian solidarity in particular.

Key Words International solidarity, regional cooperation, social movement, activist, NGOs, ethnocentrism, local knowledge, area studies, area specialist, democracy, human rights, advocacy